

고정자산세 상각자산조사에 대한 지원

후쿠오카현



[배경]

고정자산세의 상각자산 과세(※)는 토지가옥과는 달리 등기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다. 시정촌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미신고자가 과세 객체인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조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에는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는 상담을 여러 시정촌으로부터 받아 2011년도에 현 내 60개 시정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많은 시정촌에서 ① 인원 부족(상각자산 전담 직원의 부재), ② 노하우 부족(현장조사 시간이 없다. 신고 접수 업무에만 그치고 있다. 현장조사 실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인원 배치가 없다.), ③ 홍보활동 부족(사업자가 신고의무를 모른다.)과 같은 문제점이 밝혀졌다.

이에 후쿠오카현에서는 ① 과세의 공평성과 적절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으며, ② 상각자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정촌의 자주재원을 충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 2012년도부터 현과 시정촌이 연계해 대응하고 있다.

※ 고정자산세의 상각자산 과세란 토지 및 가옥 이외의 사업용 자산(기계설비 등)에 과세하는 것.

국제적으로도 미국이나 캐나다의 재산세(Property Tax), 영국의 비즈니스 레이트

(Business Rate), 홍콩의 레이트(General Rates), 한국의 재산세, 필리핀의 고정자산세(Real Property Tax) 등으로 과세되고 있다.

[사업 목적]

- 상각자산 과세의 적정화 및 세수 확보
- 시정촌 직원이 상각자산 조사와 관련해 노하우 취득
- 상각자산 적정 과세와 관련된 관리감독자의 이해와 체제 정비

[사업 개요]

시정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응하고 있다.

(1) 인원 부족에 대한 대응 (2012년도~)

후쿠오카현은 연 3회 부시정촌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부시정촌장 및 인사·재정 담당 과장 등을 대상으로 현과 시정촌이 연계해 상각자산 과세의 적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시정촌의 자주재원을 충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세무과 직원의 인원체제에 대한 배려를 당부하고 있다.

(2) 노하우 부족에 대한 대응

가. 관리감독자 연수회 개최 (2013년도~)

시정촌의 세를 소관하는 관리감독자(과장급 직원)를 대상으로 적절한 상각자산 과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요구할 목

적으로 연 1회 개최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총무성 직원 및 현 내 시정촌 직원에게 강사를 의뢰해 상각자산 과세의 현재 상태에 대한 해설을 듣고 시정촌의 선진적 대응에 관한 사례를 발표했다.

나. 전체회의(담당자 연수회) 개최 (2012년도~)

상각자산 과세 실무에 관한 시정촌 직원의 지식 향상 및 레벨업을 목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며, 2017년도에는 연 3회 실시했다.

(2017년도의 테마)

제1회	① 상각자산 과세에 대해, ② 상각자산 과세와 관련된 조사 과정에 대해, ③ 사례 검토 및 조사의 참고 사례
제2회	①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을 읽는 법에 대해 (고정자산 세 특례 등)
제3회	① 현장조사사무에 대해 (사례 발표), ② 법인세신고서 등을 읽는 법 (그룹 토의)

다. 지구별 회의 개최 (2012년도~)

전체회의의 각 회 마지막에 시간을 마련해 현 내를 9개 블록으로 나눠 지구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인근 시정촌끼리 정보를 연계하고 보조를 맞춰 조사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정촌 직원에 의해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도의 의제)

제1회	① 진행자 결정, ② 세무서 열람에 대해 (일정 조정 등)
제2회	① 간이조사에 대해
제3회	① 상각자산 조사의 의문점에 대해 (자유 토의)

라. 광역사업소조사 실시 (2013년도~)

현 내 여러 시정촌에 사무소 또는 점포를 가진 사업소(소위 체인점 등)를 대상으로 관계

시정촌이 보조를 맞춰 조사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8개 사업소와 2개 업종(사업소를 특정하지 않고 업종만 설정)을 대상으로 했다.

현은 광역사업소회의라는 장을 제공하고, 외부에서 초빙한 어드바이저의 협력을 받아 시정촌이 연계해 실시하는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사업소회의도 지구별 회의와 마찬가지로 시정촌 직원에 의해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먼저 사업소·업종별로 시정촌의 담당자 중에서 반장을 선정하고 그 후의 진행을 반장에게 맡긴다.

2017년도에는 광역사업소회의를 4회 개최했으며, 어드바이저로부터 세무서 열람에서 파악해야 할 사항, 고정자산대장을 요청하는 방법, 고정자산대장과 상각자산 신고서의 정합성 분석 등 적절한 조언을 받고 있다.

또한 시정촌이 각 세무서에서 원활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매년 현은 후쿠오카 국세국을 통해 세무서에 협력 의뢰하고 있다.

마. 현 직원의 시정촌 파견 (2013년도~)

시정촌에서 사업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 등을 목적으로, 현 직원이 조사에 동행해 지원하고 있다.

(3) 홍보활동 부족에 대한 대응 (2012년도~)

세무사회의 협력하에 임원회에서 주지 협력 의뢰 등 대해 설명하고 회보용 삽입 전단지 등을 동봉하고 있다.

또한 상각자산신고에 관한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시정촌 외에 현세사무소, 세무서에 배포하고 있다.

[특장점, 선진성]

이러한 대응은 일본에서도 선구적인 것이며,

시정촌 직원의 기술 향상과 세수 확보에 대한 효과를 인정받아 2015년도에는 자치세무국장 특별표창(총무성)을, 2016년도에는 선진정책참조회의 우수정책표창(일본지사회)을 수상했다.

[효과]

이상의 대응에 대한 참가 시정촌 수, 대응에 의한 세액 베이스의 효과액은 다음과 같다.

	2012 년도	2013 년도	2014 년도	2015 년도	2016 년도
참가 시정촌 수 (건)	40	51	48	50	47
효과액 (백만 엔)	51	96	138	267	213

[앞으로의 전개]

고정자산세는 시정촌세이기 때문에 이 대응의 실시는 시정촌 직원에 의한 자주적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현은 시정촌 직원이 모여 대화하는 장과 연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시정촌 간의 연계 강화 및 시정촌 직원의 과세능력 향상을 지원해 왔다.

이 대응을 시작한 후 6년차를 맞이해 과세의 적정화와 시정촌 자주재원의 충실한 확보라는 당초의 목적을 상당히 달성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시정촌의 조사 기술이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소관 연락처]

담당 소속: 기획·지역진흥부 시정촌지원과

전화번호: + 81-92-643-3076

이메일: shien-zeisei@pref.fukuoka.lg.jp